# 주간건설 Review

523호 2018.2.23(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 업계 동향

- 포스코건설, 인천지역 꿈나무 장학금 전달
-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제1회 포니정 학술지원 연찬회' 참석
- 한화건설, 설 맞이 나눔봉사활동
-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와 상생경영
- 동부건설, 협력업체 기성대금 설 연휴 전 조기지급

## ▣ 건설경제 일반동향

- 안전진단기준 강화 피해 재건축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역대 최저 수준

##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발표
- 제재받은 건설사에 대한 분양시기 제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혁신형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18.2.10.(토)~2018.2.23(금)> | 제523호 2018.2.23(금)

## <업계 동향>

### ◈ 포스코건설, 인천지역 꿈나무 장학금 전달



포스코건설 꿈나무 장학금을 전달하는 한찬건 사장(사진 좌측)

○ 2월21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포스코건설로 부터 '인천지역 꿈나무 장학생'을 위한 성금 2,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힘

○ '꿈나무 장학금'은 2011년 인천지역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이래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사업으로 2017년 포스코건설 직원들의 사외 강사료를 비롯해 이해관계자가 보낸 명절선물·승진축하 화훼 등 경매수임금과 사랑의 저금통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금으로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하였음

○ 성금은 인천지역 고등학생 25명에게 2,500만원이 전달되며, 포항지역 고교생 10명에게 500만원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임

### ◈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제1회 포니정 학술지원 연찬회' 참석



2018년도 포니정 학술지원 신진연구자로 선발된 신호재 박사, 정몽규 회장, 정동훈 박사(사진 왼쪽부터)

○ 2월21일 포니정재단은 삼성동 파크하얏트서울에서 포니정 학술지원 연구자의 연구 성과 공유와 학술 교류를 위한 '제1회 포니정 학술지원 연찬회'를 개최하였음

○ 이날 행사에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비롯한 재단 이사진과 어윤대 전 고려대학교 총장, 박길성 고려대 교육부총장, 포니정재단 학술지원 사업 역대 수혜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음

○ 정몽규 회장은 축사에서 "포니정 학술지원 연찬회를 통해 인문학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문학이 사회 근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한편 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도전·혁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장학재단인 포니정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인문학 분야 발전을 위한 학술지원 사업을 펼쳐왔음

## ◈ 한화건설, 설 맞이 나눔봉사활동

○ 2월12일 한화건설은 설 명절을 맞아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나눔봉사활동을 진행하였음



설을 맞아 명절선물을 제작해 이웃들에게 전달한 한화건설 임직원들

○ 이번 봉사활동에는 한화건설 임직원 60여 명이 참여, 명절음식과 명절 선물세트를 직접 만들어 인근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음

○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 꿈에그린 도서관 62호점, 66호점 개관으로 한화건설과 인연을 맺은 곳으로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화건설 이윤식 경영지원실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을 담은 명절음식과 선물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건설사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 ◈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 2월13일 계룡건설 이승찬 사장은 설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효광원(대전 동구 소재)에 떡국용 떡과 고기를 전달하였음



이승찬 사장

○ 앞서 계룡건설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써 '희망 2018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세종·대전·충남에 성금 1억 5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지난 1월17일에는 명절을 앞두고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비역들을 위한 위문금 1000만원을 육군본부에 전달하며 민·군 협력 후원 사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음

○ 이날 이승찬 계룡건설 사장은 "고 이인구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 포스코건설, 설 앞두고 협력사와 상생경영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과의 상생경영과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에 나선 포스코건설 임직원들

○ 2월13일 포스코건설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과의 상생경영을 위해 중소 협력사들에게 800억원의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고 밝힘

○ 포스코건설은 협력사들과의 상생차원에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설명절 자금 조기집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기집행 대상은 구정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거나, 지급기일이 2월 말인 외주비가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음

○ 포스코건설은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건설사로는 최초로 2010년부터 거래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고, 경영.공정관리 분야의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이날 인천지역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포항과 광양에서도 자매마을 7곳을 방문해 생필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였음

## ◈ 동부건설, 협력업체 기성대금 설 연휴 전 조기지급

○ 2월13일 동부건설은 설 연휴를 맞아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성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힘

○ 동부건설의 기성대금 집행은 애초 2월 말 집행 예정이었으나 설 연휴 전인 2월14일로 앞당겨 전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였음

○ 동부건설은 지난해 추석에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기성대금 약 400억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올 설날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대금 지급을 진행한다고 설명하였음

○ 동부건설은 회생절차를 지나 회사 정상화를 위해 동고동락한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 ◈ 안전진단기준 강화 피해 재건축 추진

○ 서울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기준 강화 발표와 동시에 서둘러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음

○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만 일단 맺어놓으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작년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들이 벼락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 이에 정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실행해야 할 정부가 재건축 가격 억제에 집착하면서 행정 혼란만 키운다는 비판 확산

**<주요내용>**

### ❒ 재건축 추진 단지 동향

- 서울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등 다수의 재건축 단지가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강화 발표 하루 만에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에 착수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이 유력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 단지명 | 준공시점 | 가구수 |
|---|---|---|
|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 1986.11 | 2,550 |
|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 | 1987. 7 | 2,030 |
| 노원구 상계주공 9단지 | 1988.11 | 2,830 |
|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지촌 | 1989. 1 | 5,540 |
| 송파구 올림픽훼밀리아파트 | 1988.12 | 4,494 |

자료 : 각 구청

- 2월21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긴급 공고문 게재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의 경우, 2월 중 접수를 마치고 3월 초쯤 업체와 용역계약을 해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
- 강동구청도 명일동 신동아아파트의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공고문을 게재하였으며, 이 아파의 경우 주민 약 96%가 비용을 이미 납부
- 이 밖에도 구로주공아파트가 2월중 용역업체 공고를 내기 위해 예치금을 구로구에 넣었고, 영등포구 일대 아파트들도 작업을 서둘러 진행 중
- 정부가 발표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을 피하기 위해선 안전진단 용역업체와

계약까지 마쳐야 하는데, 통상 현지조사~안전진단 의뢰에만 최소 20여 일이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현재 안전진단 용역업체 공고가 진행 중인 단지들의 법 적용 여부가 주목됨

❒ **정부 동향**

- 2월21일 국토교통부는 붕괴 우려가 없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지금까지 구청 관할이던 안전진단 과정에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 현행법상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금번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3월2일까지인 '10일간'으로 설정
- 이처럼 이례적인 행정예고기간 단축에 대해 국토부는 재건축 단지들이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안전진단을 밀어넣어 빚어질 혼란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

❒ **문제점**

- 재건축 추진을 진행 중인 단지들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중앙정부가 혼란을 키운다며 반발
- 도정법 시행령은 2월26일쯤 입법예고될 전망인 가운데, 국토부는 통상 40일 정도인 입법예고기간을 3월 말 정도까지로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시행되고 도정법 개정안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준은 적용받고 시행령은 적용받지 않는 상황도 예상
-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평가되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주민들의 안전진단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의 재건축 추진 공식화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동의서 징구가 바로 완료된다 하더라도 현지조사 용역업체 선정까지 최소 20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역대 최저 수준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2월)'에 따르면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형사업은 전체 40건 중 절반인 20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되어 정부의 SOC 투자 축소기조와 맞물려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

<주요내용>

❒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 연간 예타 통과율은 지난 2014년(79.3%)까지만 하더라도 평균 80% 내외를 유지해 왔으며 90%를 넘어서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3년간은 급락세를 보임
- 2015년에는 34개 조사대상 중 25건이 통과해 73.5%를 기록했으나 2016년에는

66.7% 하락하였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초 수준에 50% 선에 그침

<2016년 ~ 2017.12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

(단위: 건수, %)

| 구 분 | 예비타당성조사 | | | 타당성재조사 | | |
|---|---|---|---|---|---|---|
| | 전체건수 | 통과 | 미통과 | 전체건수 | 통과 | 미통과 |
| '16년 1월~12월 | 39 | 26 (66.7%) | 13 (33.3%) | 9 | 4 (44.4%) | 5 (55.6%) |
| '17년 1월~12월 | 40 | 20 (50.0%) | 20 (50.0%) | 10 | 4 (40.0%) | 6 (60.0%) |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월호), 연도별 완료사업은 부처 통보 기준

**❒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재조사 통과 사업**

- 지난해 정부 예타를 통과한 20개 대형사업 중 선박건조 등을 제외한 SOC 프로젝트는 모두 17건, 총사업비 10조3,239억원 규모였으며,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4건, 5,400억원 수준에 그침
- 이에 대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정부 산하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성을 볼모로 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역개발을 번번이 가로막고 있고, 현재 같은 규제 운용으로는 새 정부의 혁신성장이나 지방분권 실현 가능성도 낮다고 비판

<2017년 예타 통과 SOC사업(17건) 현황>

(단위 : 억원)

| 연번 | 부처 | 사 업 명 | 총사업비 |
|---|---|---|---|
| 1 | 행복청 | 조치원 우회도로 | 1,327 |
| 2 | 행복청 |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 721 |
| 3 | 국토부 | 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사업 | 2,632 |
| 4 | 행자부 | 이화~삼계간 도로 개설 | 1,196 |
| 5 | 여가부 | (국립) 대구직업체험청소년수련원 건립 | 537 |
| 6 | 국토부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 59,576 |
| 7 | 산림청 |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 | 1,530 |
| 8 | 문체부 |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 852 |
| 9 | 국토부 | 한강하류4차급수체계조정사업 | 1,705 |
| 10 | 국토부 | 진주~광양 전철화 | 2,402 |
| 11 | 국토부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파주연장선 건설사업 | 3,333 |
| 12 | 국토부 |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 7,915 |
| 13 | 국토부 | 세계 선도형 스마트도시 구축 | 1,159 |
| 14 | 산업부 | BJFEZ 북측진입도로 건설공사 | 1,329 |
| 15 | 고용부 | 경기장애인능력개발원(가칭) 신축사업 | 1,136 |
| 16 | 국토부 | 목감천 치수대책 1단계 사업 | 2,844 |
| 17 | 국토부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 13,045 |

<2017년 타당성 재조사 통과사업(4건) 현황>

(단위 : 억원)

| 연번 | 부처 | 사 업 명 | 총사업비 |
|---|---|---|---|
| 1 | 복지부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 | 794 |
| 2 | 국토부 | 중부고속도로 남이~음성 확장공사 | 1,696 |
| 3 | 해수부 | 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 건설 | 2,249 |
| 4 | 국토부 | 원주천댐건설 | 661 |

##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2월22일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 이는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

<개정안 주요내용>

❒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제한**

| 현 행 | 개 선 |
|---|---|
| -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 | -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 |

##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발표

○ 국토부는 2월20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 조정과 전문기관의 권한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

○ 개정 안전진단 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로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되며, 이르면 1~2개월 안에 적용될 전망

○ 한편,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2월21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함

<'개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주요내용>

❒ **현지조사 단계부터 공공기관 참여 허용**

-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를 공

공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구조안전성' 비중 상향조정 (평가항목별 가중치 조정)**

-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

| 구분 | 현행 | 개정 |
|---|---|---|
| ***구조안전성*** | *20%* | *50%* |
| **주거환경** | 40% | 15% |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 30% | 25% |
| **비용분석** | 10% | 10% |

- 다만,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주거환경 평가결과 E 등급)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으로 판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함

❒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검증절차 신설**

-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여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도록 함
- 다만,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토록 함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마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토록 함

## ◈ 제재받은 건설사에 대한 분양시기 제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월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재처분 받은 건설사에 대한 분양시기 제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됨

○ 이후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에 대한 선분양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며, 벌점 수준에 따라 공정률 등 단계적으로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선분양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전망

○ 최근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지자체 등과 '특별점검반을 구성('17.9월)하여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총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였으며, 그 결과 영업정지 3개월과 부실벌점 30점 등 제재처분을 진행할 예정

○ 한편,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사실상 신규 수주 제한 조치로, 국토부는 신규 기금 대

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제재받은 건설사에 대한 분양시기 제한**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 혁신형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최근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지원단('18.1월 출범) 킥오프(Kick-off)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혁신형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

○ 연구용역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선낙찰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 우선낙찰제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서부터 적격심사(300억 미만), 종심제(300억 이상), 기술형입찰 등 모든 방식에 적용될 예정

○ 이에 따라, 각각의 낙찰률 등이 공사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재부는 연구 수행과제로 공사비 적정화 및 종심제 변별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기재부는 금번 연구용역에 공사비 적정화 및 종심제 개선 과제가 포함될 경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선낙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마련

○ 2월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마련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주요내용>**

**❒ 대.중소기업 간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상생협력법」 개정 추진, '18.하)

**❒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요구금지 제도 강화**

-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를 허용하고, 요구서면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①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당한 사유'를 최소한으로 삭제·정비하고(「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 '18년), ②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 등 명시를 의무화 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18.6월)

**❒ 기술임치 활성화**

- ①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임치수수료 감면, 임치 기술의 사업화 연계 지원 강화, ②일부 표준하도급계약서(13개)에 규정된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미 도입된 기타 표준하도급계약서(21개)에 확대 도입('18년)을 통해 기술임치를 활성화할 계획

❒ **(가칭)'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도입**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 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공증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

❒ **기술자료 정당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 거래前 단계에서의 표준계약서 양식이 부재한 관계로, 거래를 검토하는 협상 단계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18.하)

❒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전환.완화**

-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自社)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 적극 도입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①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18년), ②손해액 추정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타 관련법률에 확대('18년)

❒ **영업비밀 법적 보호장치 강화**

- ①영업비밀 보호요건 완화, ②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추가, ③벌금 상한액 10배 상향 법안의 조속한 통과 추진('17.1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정부 발의, 상임위 계류중)

##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 2월9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재 처분을 연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함

○ 임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안원문에 따르면, 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을 기준으로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비율은 높으나, 처분기관 즉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승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3년~'16.8월 조달청 처분기준 가처분신청 204건 중 183건이 인용(89.7%)되었으나,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본안판결 승소비율은 88.5%로 나타남

<주요내용>

❒ **개정안(발의내용)**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자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함

**❒ 개정안에 대한 업계입장**

- 본안소송에서 발주기관 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합당한 처분이 아닐 수도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인해 해당 업체가 입을 손해가 막대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판결을 통해 법 위반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재제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제재의 효과는 달라지지 않음
- 실제 대법원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대법원 판례, 1986.03.21. 86두5), '처분으로 인해 공익상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이다'라고도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판례, 1986.03.21. 86두5)
- 일각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관은 법령상 처분권한은 있지만, 처분 해제권한은 없음으로, 법령을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음